

2021년 12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인터넷 · 통신은 12월 20일 11시부터 보도)

공익직불정책과 과장 김기환(044-201-1771), 사무관 지수아(1775) / 제공일: 12월 20일(총 9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공익직불제 시행 2년..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 조사 · 분석 -

《 주 요 내 용 》

◆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년 농가소득 중 농업 공적보조금(공익직불금 포함)의 평균 수령액이 전년 대비 107만원(39.8%) 증가,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지니계수)가 '19년 0.623에서 '21년 0.459로 하락, 중소농 직불금 비중 증가 및 논·밭 면적당 직불금 격차 완화 등 형평성 개선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한국농업경제학회)

- (만족도) 공익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82.8%,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82.7%로 높음
- (기여도) 공익직불제 도입이 공익기능 중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응답
- (사용지역·용도) 본인 거주지 사용 84.2%, 영농활동 사용 70.6%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영농 부담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소농 · 고령층 두드러져

- ❖ '20년 농업 공적보조금(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원(39.8%) 증가
- ❖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70세 이상 55.1%

□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농업외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 공적보조금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이 포함됨(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 등 제외)

○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농가·농업인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19) 109만원 → ('20) 203 (86.2% 증가)

* 농가소득('20년) : 평균 4,503만원(농업 1,182만원, 농업외 1,661, 이전 1,426, 비경상 234)

○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농, 논 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로 형평성 개선

- ❖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중소농에 대한 지급비중 증가
- ❖ 논 · 밭 면적당 수령액의 격차는 점차 완화

□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직불금 수령액 십분위수 및 지니계수 >

	2019년 (도입 전)	2020년	2021년
십분위수*	22.722	8.546	8.426
지니계수**	0.623	0.463	0.459

* 십분위수 =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 / 하위 10%),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음

**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

□ (경작규모)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 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하였다.

○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 원)로, '19년 19.5%(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하였다.

< 경작 규모별 지급총액 및 비중 >

(억 원, %)

	0.1ha 이상 ~0.5ha 이하	0.5ha 초과 ~2h 이하	2ha 초과~ 6ha이하	6ha 초과	계
2019년	1,306 (10.6)	4,642 (37.6)	3,994 (32.3)	2,414 (19.5)	12,356 (100.0)
2020년	5,084 (22.3)	8,043 (35.3)	6,170 (27.1)	3,472 (15.2)	22,769 (100.0)
2021년	5,391 (24.2)	7,723 (34.6)	5,890 (26.4)	3,297 (14.8)	22,300 (100.0)

□ (논·밭)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21년 91.8%로 상승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다.

< 논·밭의 ha당 직불금 지급액 >

(만원/ha, %)

	2019년	2020년	2021년
논	129(100)	209(100)	211(100)
밭	56(43.1)	186(89.2)	194(91.8)

* '19년은 논·밭 각각 지급된 반면 '20년부터는 공익직불금으로 지급, 전체 논·밭 비율을 적용해 추산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한국농업경제학회) >

-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거주지역, 수령한 직불금 종류,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공익증진 효과, 주요 사용지역 및 용도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개요 >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경제학회
- (조사대상 및 기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21.12.2~9
- (표본추출) 일반 농업인 및 KREI 현지통신원 중 거주지역·연령·경작면적·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례 추출한 3,000명 대상 조사, 유효 응답자 수 600명
- (조사방법) 전화 및 온라인조사

❖ “공익직불제 만족” 82.8%, 논·밭 형평성 개선에 대해 82.7%가 만족

-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였고,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매우 만족 9.8% 대체로 만족 35.8, 어느정도 만족 37.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14.5,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2.7

-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매우 만족 18.7% 대체로 만족 35.8, 어느정도 만족 28.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13.8,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3.5

❖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 매우 기여 23.2% 대체로 기여 31.5, 어느정도 34.0, 별로 기여하지 않음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1.3

** 매우 기여 22.7% 대체로 기여 31.2, 어느정도 32.3, 별로 기여하지 않음 12.2, 전혀 기여하지 않음 1.7

- 그 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매우 기여 19.3% 대체로 기여 29.2, 어느정도 30.8, 별로 기여하지 않음 18.2, 전혀 기여하지 않음 2.5

** 매우 기여 13.7% 대체로 기여 26.3, 어느정도 33.2, 별로 기여하지 않음 23.2, 전혀 기여하지 않음 3.7

❖ (지역) 직불금 수령 농업인 84.2%는 본인 거주지역(시·군)에서 사용

❖ (용도) 직불금 사용 농업인 70.6%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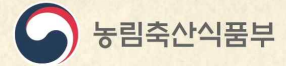
-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0.0%,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하여,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다.

-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은 56.7%가 영농 활동, 36.7%가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하였다.

< 향후 계획 >

-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전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붙임 2)을 홍보 중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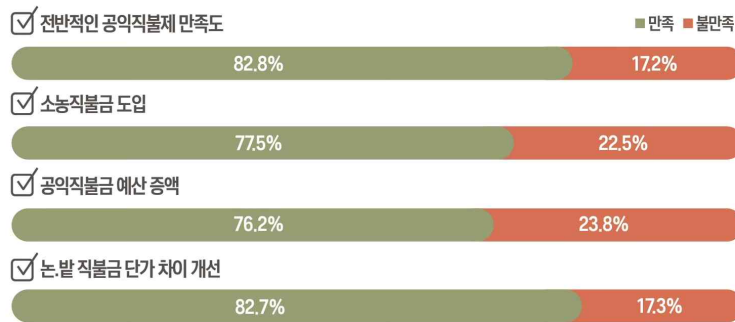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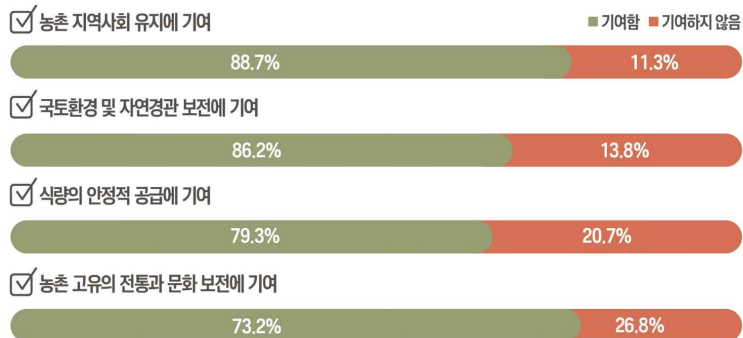
조사 개요

- (조사주관 및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업경제학회
- (조사대상 및 기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21.12.2~9
- (표본추출) 일반 농업인 및 KREI 현지통신원 중 거주지역·연령·경작면적·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례 추출한 3,000명 대상 조사, 유효 응답자 수 600명
- (조사방법) 전화 및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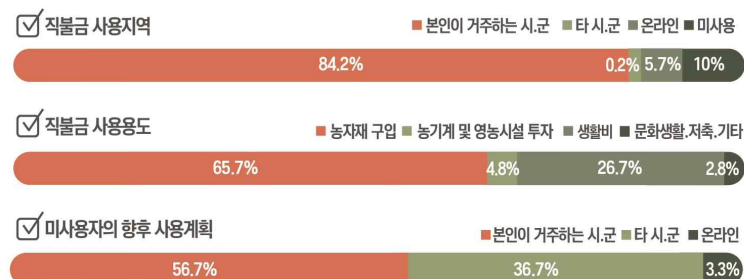
공익직불제 만족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기여도



직불금 사용지역 및 용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1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제외)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조경수 식재 등

☞ 폐경면적 신청시 직불금 10%가 감액됩니다.



2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거나 임산물이 재배되는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3

임대차 농지는 농사짓는 농업인이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준비하기



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안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아래와 같이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2. 집합교육: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
- ☞ 교육 미 이수시 직불금 10%가 감액 됩니다.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 생활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되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

☞ 방치 및 소각시 직불금 5%가 감액됩니다.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매월 1회 이상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을 보관 및 농작업 내역 기록
(농약 사용일, 제품명, 사용량 등)

☞ 미 작성시 직불금 5%가 감액됩니다.



마을 공동활동 참여

마을가꾸기 대청소, 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1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미 참여시 직불금 5%가 감액됩니다.

